



Theme. 일제의 식민 통치와 경제 수탈 정책

1910~ ⇒ [무민 통치]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총독(일왕 직속, 육해군 대장 중에서 임명) ↳ 정무총감·경무총감, 중추원(자문 기구) • 헌병 경찰 : 즉결처분권, 조선 태형령(1912) • 관료와 교원 → 제복을 입고 칼을 착용 • 언론·출판·집회·결사의 자유 제한 • 제1차 조선교육령(1911) • 안악 사건(1910) → 105인 사건(1911) 	
[토지조사사업(1910 ~ 1918), 토지조사령(1912)]	
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"> <p>▣ 대한 제국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all 토지 대상 • 탁지부 • 양지아문 • 지계 발급 • 일부 지역 </div>	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"> <p>▣ 일제 토지 조사사업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임시 토지 조사국(1910) • 기한부 신고주의 원칙 • 농경지 대상(임야 제외) • 총독부 지세 수입 증가 • 식민지 지주제 확립 : 관습적 경작권 부정 </div>
[산업 침탈]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회사령(기업 허가제, 1910 ~ 1920) • 삼림령·어업령·도로 규칙(1911) • 은행령(1912), 지세령(1914), 광업령(1915) • 수리조합령(1917), 임야조사령(1918 ~ 1935) • 인삼(홍삼), 소금 등의 전매제도 • 조선 물산 공진회(경복궁, 1915) • 조선식산은행(1918) 	
[철도]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경원선·호남선(1914) 	

3·1 운동
⇒

1920~ ⇒ [기민적 문화 통치]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친일파 양성해 민족 분열 도모(자치론 등장) • 문관 총독 임명 가능 → 실제 임명 No! • 보통 경찰 → 인원·유지비 증가, 고등경찰제 • 치안유지법 적용(1925) → 감시·탄압 강화 • 조선·동아일보 발행(1920 ~ 40) → 검열·정간 • 도 평의회·부면협의회 → 부분 자치 허용 • 제2차 조선교육령(1922)
[산미증식 계획(1920 ~ 1934)]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배경 : 공업화 성공(日) → 쌀 부족 현상 • 내용 : 품종 개량, 수리 시설 확충 ↳ 소작농의 부담 증가 → 소작쟁의 : 흥남 질소 비료 공장(1927) • 결과 : 증산량 이상의 쌀이 일본으로 반출 : 국내 식량 사정 악화 ↳ 만주에서 잡곡 수입 : 쌀의 단작 현상(밭 → 논)
[회사령 폐지(1920)]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신고제 전환, 일본 대기업의 조선 진출
[관세 철폐 움직임 → 철폐(1923)]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조선 물산 장려 운동 전개(평양, 1920 ~)
[산업 침탈]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연초(煙草) 전매령(1921) • 신은행령(1928)
[철도]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함경선(원산 ~ 회령, X자축 철도, 1928)

대 공황
⇒

1930~ ⇒ [민족밀실 통치]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내선일체 강조, 일선동조론 주장 • 황국신민서사, 창씨 개명, 궁성요배, 신사참배 • 조선 사상범 보호 관찰령(1936) • 조선 사상범 예방 구금령(1941) • 제3·4차 조선교육령(1938·1941 → 1943) : 조선어 상용 금지, 소학교 → 국민 학교 : 조선어학회 사건(1942)
[조선농촌진흥운동 (1932 ~ 1940)]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조선소작조정령(1932), 조선농지령(1934) ↳ 소작 조건 개선 및 농가 경제 개선 계획 • 소작 쟁의 완화, 농촌 통제
[병참기지화 정책(1931 ~)]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군수공장의 북부 집중
[남면복양 정책(1934 ~)]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일본 방직 산업의 원료 확보
[중·일 전쟁(1937)] → 국가 총동원법 제정(1938)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인적 : 근로보국대(1938), ‘몸빼’ : 지원병제(1938) → 학도지원병제(1943) : 징병제(1944), 정신대 근로령(1944) • 물적 : 미곡 공출(by 애국반) → 배급제 실시 : 금속류 회수령(1941), 영단주택(1941) : 조선식량관리령(1943)